

통 상

전 망

IMF지원하의 통상환경 전망(II)

국제부

목 차

I. 세계경제 전망 및 최근의 통상환경

1.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2. IMF 금융지원의 주요내용
3. 통상측면에서의 영향

II. 국제무역관련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1. WTO
2. OECD
3. APEC

III. 주요 다자협상 현황과 전망

1. ITA(정보기술협정)
2. WCO 통일원산지
3. 투자이슈
4. 전자상거래
5. 무역과 환경
6. 뇌물방지규범
7. 무역과 경쟁정책
8. 규제개혁

IV. 1998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

1. 미국경제 현황과 전망
2. 1998년 한미간 주요 통상문제
3. IMF 구제지원이 한미통상에 미치는 영향

V. 1998년 EU 통상환경 전망

1. EU경제 현황과 전망
2. 한·EU 반덤핑 현황과 전망
3. EU의 주요 통상이슈

4. 전자상거래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이용확대로 새로운 형태의 거래형태인 전자상거래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 세계전체의 인터넷 거래는 1996년의 5억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66억달러(최대 6,0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1996년의 14억원 수준에서 2000년에는 614억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상의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케팅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적인 틀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 OECD는 전자정보의 교환 등과 같은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1994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3개의 권고와 1개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도 1996년 5월에 국제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에 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APEC,

ESCAP 등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1997년 7월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관세 및 무과세, 전자지불제도, 상거래 국제규범,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 생활(privacy) 보호 등 9개 항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통상성을 비롯 정부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EU는 1997년 4월 「유럽의 전자상거래 대응방향(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여 유럽이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고 7월에는 독일 본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무역지대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자상거래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어 장래 '사이버라운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 IMF 구조조정기에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대외통상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이다.

5. 무역과 환경

○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반대중의 환경인식

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 특히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의 환경관련 조치가 상당한 무역효과를 수반하게 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형태마저 눈에 띄게 되어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GATT/WTO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 이에 WTO, OECD 등을 위시한 각종 국제 기구들은 무역-환경의 연계문제에 대해 이슈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특히 제품무관 PPMs에 근거한, 즉, 제품자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생산 공정상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별국이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환경조치, 무역조치)가 가장 큰 무역과의 마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지금까지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제품무관 PPMs에 의거한 환경관련 각종 조치들의 시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들과 WTO간의 조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제품무관 PPMs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조치로서의 환경관세,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라벨링 등이 향후 우리나라가 감당하게 될 환경라운드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무역관련 환경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

데, 작년 12월에 개최된 교토 지구온난화방지 총회는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평균 5.2%로 정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 동총회에서는 '95년 제1차 베를린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6가지 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줄이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 문제는 G-77그룹 및 중국 등 개도국의 반발에 따라 합의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게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며 내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 리스트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참여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뇌물방지규범

○ OECD, WTO 및 IBRD 등 여러 다자간 채널을 통해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방지를 위한 규범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중 OECD 및 WTO차원에서의 논의 및 결과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OECD의 경우 97년 5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

한 뇌물공여의 방지를 위한 개정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 여기에서는 한편으로 국제뇌물공여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회원국의 후속적인 입법조치를 1998년 3월까지 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정작업을 금년 7월 개시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 밖에도 국제뇌물공여의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강화, 조세상의 조치 및 정부구매에 있어 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권고하고 있다.

○ 1997년 5월 OECD 개정권고에 따라 지난 7월 개시된 협약교섭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협약안을 지난 11월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협약」에 관한 서명을 97년 12월 17일에 하였고, 98년중 서명국의 국내법적 절차 [비준]를 거쳐 98년말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WTO 차원에서도 지난 1996년 12월 각료회의 결과 정부조달부문에 있어 부패의 규제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7. 무역과 경쟁정책

○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경쟁의 광역화로 무역정책은 경쟁정책과 피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게 됨에 따라 경쟁정책이 통상이슈의 하나로 부각되고 국제간에 정

책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관세 및 비관세 등 국경장벽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국경내에서 기업의 거래관행에 의한 반경쟁적인 요소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일본의 Fuji사와 미국의 Kodak사 간에 시장점유율을 둘러싸고 발생한 무역분쟁이 경쟁이슈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작 WTO 협정에는 아직 경쟁이슈와 관련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직접적이고 적절한 규범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국의 국내시장구조와 기업의 영업관행을 제거하고 경쟁조건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의 조화 더 나아가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최근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convergence), 양자간 협정, 다자간·복수국가간 협정 등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OECD와 WTO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경쟁라운드가 빠른 시일 내에 전개될 전망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무역과 경쟁정책간 상호관계에 관한 WTO실무그룹이 97.9월부터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98

년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어 98년말경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8. 규제개혁

○ 최근 각국이 시장경제의 효율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WTO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규제개혁이 무역을 증진시키고 세계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WTO에서는 TBT(기술장벽)협정, SPS(위생·검역)협정, GATS(서비스) 협정 등에 입각하여 각국정부의 관련규정들이 무역장벽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 OECD에서는 95년 각료회의의 위임을 받아 최근 2년간 규제전반에 대하여 분야별, 주제별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검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방안을 마련 중이다.

○ 무역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대하여 최근의 국제논의 동향은 다자차원에서는 현재 각국의 규제내용에 대한 국제규범과 통일된 원칙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자나 지역차원에서는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 양자·지역차원의 협력방안으로서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상호인증협정은 동일한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당사국들이 상대국의 검사를 인정해주어 자국에서는 검사를 면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역내 국가들간에 이 협정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간에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IV. 1998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

1. 미국경제 현황과 전망

① 최근의 경기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 미국경제는 90년대 들어 시장의 자유경쟁기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이 주효하여 금융과 노동시장을 위시한 경제전반의 효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 구조적 문제점인 재정적자도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증가와 행정부의 노력으로 1997년 회계연도중 300억불 내외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빠르면 1998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해 오며 따라 안정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경제기반이 조성된 상황이다.

② 1998년 2.5%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경기조절 차원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1997년 4/4분기 이후 1998년까지는 가계부채부담 증가와 재고조정 등으로 완만한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1997년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경제는 1998년에는 2.5%내외(DRI, World Economic Outlook, 97년 3/4분기 및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7년 8월)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달러고 영향이 지속되면서 1997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1998년에는 확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2. 1998년 한미간 주요 통상문제

① 개관

○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의 범위와 파장을 고려해 볼때, 한미간의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현안의 중요성이 1998년 초반부에 부상되리라 예상. 가용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자동차 및 반도체 등과 같은 통상에 민감한 산업의 교역량의 확대를 크게 줄일 것이다. 한편 한국의 환율의 가파른 상승과 기존보다 느린 경제성장은 수입수요를 억제케 되어 결국 우리의 시장 확대 노력에 대한 선진국의 우려를 야기할 것이다.

○ 만약 현재의 금융위기가 1998년말까지 계속된다면, 한미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미국상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한미 무역수지에서 미국측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지역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로 인해 일본과의 무역수지에서 미국의 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에 점차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의 저성장과 주식 및 금융시장의 침체를 유도케 될 것이다.

○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경제의 저성장 및 금융시장의 약화 등으로 1998년 의회선거가 예정된 미국에 있어 통상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대두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1998년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한 통상 압력이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IMF와 합의한 개혁 및 긴축조치를 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는 통상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1998년 한미 통상현안 전망

1) 자동차 시장의 우선협상 대상국관행 지정

○ 주지하듯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997년 10월 1일 발표한 우선 교역 확대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무역장벽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USTR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investigation)에 착수하였다.

○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조사(investigation)는, 만약 USTR이 한국의 자동차시장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정할 경우,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및 제3국에서의 한국 업체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IMF 지원조건으로 자동차 및 반도체의 새로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동차 산업의 시장개방 및 교역은 한미간의 중대한 통상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명령은 한미간에 중대한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남아있다. 주지하듯이 미상무부는 3년 연속 재심기간동안 한국의 DRAM 제조업체의 덤핑사실을 발견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8월 한국산 DRAM에 대한 반덤핑 관세명령의 철회를 거부했다.

— 그 결과, 한국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

○ 또한 DOC는 한국산 컬러

TV(삼성전자)에 대해서도 5년 연속 재심기간 중 덤핑한 사실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명령의 철회를 거부하여 왔고 이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WTO에 제소하였다.

— 그러나 미상무부는 마침내 1997년 12월 22일 상황변화 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부과 철회의사를 공고하였다.

— DOC는 삼성전자가 3년 연속 미소마진(de minimis)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지난 6년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아(sold at no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미래 덤핑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철회사유로 들고 있다.

○ 이러한 DOC의 입장변화는 한국의 WTO 제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할 점은 이번 철회판정이 단지 예비판정으로, 후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comments)이나 법적 주장(legal arguments)에 의해 번복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종판정은 이해 관계인의 연기 요청이 없는한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인 98년 3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1997년 12월 22일 DOC는 한국의 컬러 TV 제조업체들이 한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컬러 TV를 제조함으로써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13년이 된 반덤핑 관세명령 우회여부에 대해 우회덤핑 조사종결을 발표하였다. 이는 1997년 12월

19일 제소자측인 U.S. Labor Unions이 우회덤핑 조사 종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시킴에 따라 동건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이러한 제소자측의 우회덤핑 조사종결 요청은 한국의 WTO 패널설치 요청 등에 대한 미행정부의 부담을 감안하여 향후 멕시코 및 태국산에 대한 직접적인 반덤핑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 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SRAM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investigation)를 실시중이며, 최종판정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3. IMF 구제지원이 한미통상에 미치는 영향

① 통상마찰에 미치는 영향

○ IMF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IMF 구제지원방안에 의해 서방국들과 함께 한국에 570억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IMF 구제지원과 이에 수반되는 한국정부 및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는 한미간의 전반적인 통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및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제한적인 여신조치로 인해 미국 해당 업계의 우려를 감소시킨 반면, 미국 업계가 기대하였던 혜택을 상쇄시키는 것은 원화절하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수출증가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미국업계의 우려는 한국이 IMF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비례하여 증가될 것이며 특히 미

국의 철강 및 반도체 업계가 민감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시장개방 문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zation) 확산

○ IMF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개혁 및 개방 조치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전통적으로 취해온 301조 같은 쌍무적 접근보다는 IMF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시장개방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확대

○ 미반도체산업협회(SIA) 및 Micron Technology 같은 미국의 전자산업의 관련협회/기업들은 예전에 정부보조로 성장해온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혜택을 주는 각종 지원의 금지를 IMF 구제협약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금지조치가 IMF합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자 및 반도체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차원의 연구지원이나 기술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④ 반덤핑조치 강화

○ 원화에 대한 달러의 강세는 한국산 제품의 비용을 감소시켜 수입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반덤핑명령하의 제심 활동의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

운 반덤핑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덤핑케이스에 대한 실제적 영향은 제품별로 다양하게 될 것이다. 원화의 약세는 한국산 제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이 달러의 측면에서 보면 하락하기 때문에 덤핑마진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반도체산업과 같이 외국산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에서는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높은 대출이자로 인해 생산비용중 부품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가이하판매(sales below cost)의 판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⑤ 한국에 대해 예상되는 정치적 공세

○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외무역적자가 심화되면, 미국 의회의 공세로 양국간 무역긴장이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무역적자가 증가되면 양당의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의 “금융위기 구제”를 위한 미국의 참여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 의회 개회식 구제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구제 참가에 무역제재 및 기타 조건을 부과하라는 압력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 현재 한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개방 문제가 다소 뒤로 밀려있고, 한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에 치중하고 있으나,

— 한국은 시장개방 부문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특히 관세 및 쿼타 장벽, 수입통관문제, 서비스분야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하고 있으며

—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 등을 계기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추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 보고 있다.

○ 시장개방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아직도 부정적 입장이다. 즉,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연기하는데 반해, 한국이 APEC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WTO 금융협상에 양허안을 내는 것은 평가할만 하나, 한국정부가 금융위기를 시장개방을 늦추는 기회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V. 1998년 EU통상환경 전망

1. EU경제 현황과 전망

① 1996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가 1997년 내내 지속

○ 이는 금융완화기조가 지속

되고 있고 미국, 동구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호조와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통화약세로 인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복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통화동맹(EMU)의 수렴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각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축소노력과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독일경제는 최근 금리인하와 마르크화 약세에 따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고용증가와 임금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제는 최근들어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질적인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② 1998년 2.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1998년 들어서는 EU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6%내외(DRI, World Economic Outlook, 97년 3/4분기 및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7년 8월)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이다. 1997년 경기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데다 금리인하와 통화가치의 대폭적인 절하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될 것

로 예상, 여기에 동구와의 EU가입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2. 한·EU 반덤핑 현황과 전망

○ 최근 카라디오용 CDP가 조사개시되어 관련업체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8년 초에 현지실사가 예상된다.

○ 팩스 반덤핑잠정판정과 관련된 EC집행위는 사무용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인상을 우려한 여러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EC반덤핑규정 Article 9(4)에 따라 확정판정은 단순다수결로 결정되는바 집행위는 회원국들을 무마키 위해 대상제품을 감열지용(Thermal transfer용도 포함 가능) 팩스기기만을 규제 대상으로 국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잠정판정에 반대했던 일부 회원국들이 확정판정에 찬성할 것이다.

○ 전자렌지 조사는 1998년 초에 재심결과(무혐의) 판정 발표가 예상된다.

○ 반도체(DRAM)는 97. 11월 종료되었으며 양국 산업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교환 및 유지체도로 대체되었다. 합의된 교환자료는 대EU 수출용 반도체판매가의 적정성 여부(원가 이하 또는 이상)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98년 1/4분기부터 적용된다.

○ CTV재심과 관련된 EC집행위는 규제지속을 제안하고 있으나

삼성과 LG전자는 재심조사에 협조하였으며 현지 생산자단체(EACEM) 회원이며 역대 투자가 상당수준에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디오테이프재심은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다.

○ 한편 98년도 신규 반덤핑제소는 이동전화기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다.

3. EU의 주요 통상이슈

① ITA(정보기술협정)

○ EC집행위는 세계 정보기술협정(ITA)의 첫 단계를 기한내 이행하였으며 더우기 추가적으로 일부 ITA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다. 끝으로 98. 1. 1 부터 ITA 적용관세율이 양허안에 의해 인하될 것이며 선언문 부속서 A, B의 개정여부 결정기한도 98. 6. 30 종료된다.

○ EC집행위는 또한 ITA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세유예와 관련된 EC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EC는 ITA의 개정을 통한 전체 관세인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간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세번변경

○ WTO는 현재 몇몇 EC회원국 세관이 분류한 일련의 컴퓨터 장비에 대한 세번분류 문제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는 아일랜드와 영국세관이 LAN 장비 수입품을 자동데이터처리기

기(ADP)로 분류치 않고 보다 세율이 높은 통신장비로 분류한데 따른 미국의 제소에 의한 것이다.

○ 또한 영국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진 개인용 컴퓨터를 자동데이터처리기로 분류치 않고 보다 높은 세율의 세번으로 분류했던바 있다. 지난 95-96년 CD-ROM 케이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EU는 일부 IT(정보통신)품목을 가전제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③ 시장접근

○ 98년은 EC의 무역장벽규정(TBR)에 따른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7. 11월에 집행위 주관으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집행위는 유럽기업들의 제소에 따라 발의된 해외시장개방 관련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유럽 기업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유럽기업들의 제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터넷웹사이트상에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 전자제품과 관련 유럽의 통신 및 전문가용 전자산업(ETPEI)은 심포지움 중 한국의 시장접근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내 시장활동의 어려움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언급한바 이 부문에 대한 TBR제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④ GSP

○ 97. 10월 집행위는 GSP규정 7조와 8조에 근거한 사회 및 환경조항의 적용과 98. 1. 1 이후 수혜대상에서 졸업문제를 다룬 두 가지 제안을 채택했다. 사회부문

에 대한 추가특혜는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 최저임금제 등 사회적 기준을 충족한 수혜국가가 요청을 하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된 추가특혜마진폭은 공산품에 대한 적용마진비율과 같다.

○ 국별/부문별 졸업제도에 의거 GSP수혜가 중단되는 한국같은 국가들도 사회조항으로 특혜를 볼 수 있으나 특혜폭은 적용관세의 25%로 제한된다. 이에 반해 공산품에 대한 GSP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제외되는 수혜국가 들의 경우 특별 인센티브조항으로부터 특혜수혜를 보지 못할 것이다.

○ 이러한 추가특혜안은 그러나 97년말 이전까지는 이사회 의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98년도 GSP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집행위안이 모두 채택될 경우에도 상당수준 수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발효된 이후에도 적용 및 조사, 결정 등의 상당기간을 요하는 절차가 남아 수출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정은 분명치 않다. 실제적으로 채택될 경우에도 현행 공산부문의 GSP규정(공산품=98. 12. 31까지, 농산품=99. 6. 30까지) 기간중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선진개도국의 GSP졸업은 98년도 GSP운용안에 주요한 변화중의 하나로서 98. 1. 1부터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3국은 규정상 모든 특혜로부터 전적으로 제외된다.